

「생활과 농약」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산업 발전 · 농산물 안전성 확보’ 위한 획기적 전환점 될 것



무던히도 힘들고 외로운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외길을 마다하지 않은 '생활과 농약'誌. 업계의 외롭고 절절한 외침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농약 및 농산물 안전성 홍보의 길잡이 역할을 해 온 '생활과 농약'誌가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일신(日日新) 우일신(又日新)의 역사를 일궈왔다.

관·산·학·연 등 모두의 협조와 지도 편달이 어우러져 가능했던 성과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또 다른 30년을 기약하며 '친환경농업과 작물보호제의 길'이란 주제를 내 걸고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 **진행** = 최운홍(한국작물보호협회 고문)
- **참석자** = 최대휴(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장), 이광하(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 임무혁(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과 연구관), 박재음(국립농업과학기술원 농약평가과장), 안영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안전과장), 허장현(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정문기(한국농어민신문 편집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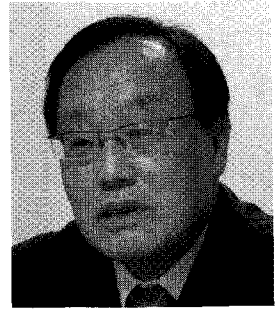
30th Anniversary

▲ 최운홍 = 그간 농축산물위생 안전관리를 총괄해 오시다가 이번에 농약까지 맡게 되셨는데 간단한 소회를 주시고, 현재 중지를 모아 개정중인 농약관리법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데 일부 진통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과 앞으로의 일정, 개정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 최대휴 = 우선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 차원에서 농약문제를 다루었으나 금번 내부 업무조정을 통해서 농약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 여건은 늘 변화하게 마련이며 농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중지를 모아 주신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향은 크게 농약산업 자체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3.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정부 입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 개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고독성 농약정책 전환 등 올 한해는 농약산업 발전과 농산물 안전성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운홍 = '안정적 먹거리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봅니다. 최근 관행농산물의 안전성이 속속 보고 되는 즈음에 이를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 이웃 일본의 예처럼 작물보호제 및 관행농산물 안전성 홍보를 위한 예산지원 등 어떤 형태든 정부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업계만의 호소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 최대휴 = 정부에서도 매년 공직자나 농약판매상,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약의 올바른 사용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면적재배작물 직권시험비를 확대하고 농약안전 보관함, 농가의 묵은 농약 수거 등 농약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인식인데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업계와 농업인들의 안전사용 등에 대한 노력이



최 운 홍
한국작물보호협회
고문



진류위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출하되거나 농약으로 인한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 대 휴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장



이 광 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

“

현재 민원처리과정 신호등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7~8월 정도가 되면 신청하신 민원이 어디쯤에 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임 무 혁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과 연구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잔류위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출하되거나 농약으로 인한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잡지의 편집 방향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최운홍 = 과장님께서 그간 농자재업무의 기반정비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성과도 크신 것으로 압니다. 특히 3월초에 열린 연찬회에서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 해 주기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셨는데 차제에 감사드리면서, 업계는 지금 그 반영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 이광하 = 먼저 연찬회가 성료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분임토의와 개인별 제출의견을 종합 정리해 보니 106건이나 되더군요. 특히, 가장 많은 의견을 내주신 “명확한 관련 규정” 의견에 대해서는 해설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민원처리과정 신호등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7~8월 정도가 되면 신청하신 민원이 어디쯤에 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찬회시 제출해주신 의견은 작은 의견들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분야별로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바로 반영이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절차를 거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홍 = 지난해 부정·불량농약 근절을 위한 상당한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정비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농약과의 형평성은 물론 최소한 자재로서의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광하 = 친환경자재 또는 유기농자재 등으로 유통된 제품들의 관리가 미흡하여 2007년도 목록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자재 관리에 있어 기본은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친환경농업육성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농약, 비료관리법 범위 내에서 친환경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때는 당연히 형평성을 맞추어서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최운홍 = 가벼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은 근자들어 사고가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 이광하 = 부임 초창기 말씀드린 기본 원칙을 두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일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간 우리가 받아왔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여러 부문에서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하며, 관행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변해야 하며, 저도 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 하려고 합니다.

▲ 최운홍 = 최근 연이어 관행농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통계를 발표해 주셔서 업계로서는 솔직히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됩니다. 드디어 소비자들의 인식에 반향이 이는 듯 하구요. 소비자의 안

심을 위해 도움말씀 좀 주시지요.

▲ 임무혁 = 소비자를 위한 식약청의 보도 효과가 상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직도 소비자들에게는 잔류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류농약 관련 연구 및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세척방법에 따른 잔류농약 제거효과”와 “과일 껍질 채 드세요”의 홍보자료는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운홍 = 소비자들은 극미량이라도 잔류농약 자체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의 미와 안전농산물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 임무혁 = 안전한 농산물이란 국가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농약이 잔류하는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농약이 잔류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해 하는게 현실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사업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최운홍 = 그간 줄곧 요구사항이었던 전문위원회 결과 설명회가 열리는 등 전향적 협조에 업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차 평가결과에 대한 peer review 프로세스 공식화 등 다양한 요구와 기대가 많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또 얼마 전 연찬회에서 '선수와 심판간의 시각 차' 라는 표현을 통해 업계와의 괴리감을 간접적으로 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러하며 극복할 수는 없는지요?

▲ **박재음** = 과거와 달리 농약 등록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는 무한하고 또한 그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이번 연찬회를 통해 실감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관에선 얼마나 시대흐름에 적절히 대처해 왔는지 한편으로 반성의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는 선수들과 눈높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먼저 현재 평가 중인 EU, 미국 사용금지 농약의 특별재평가를 올 상반기까지 매듭짓고 또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농약등록평가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시험기준을 대폭 손질하며 평가기준도 명문화하여 기준 적용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평가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갈 생각입니다. 특히 기준(안) 수립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을 수렴, 선진화된 평가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기준의 신뢰성과 평가의 투명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최운홍** =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농과원의 인력이나 시스템 하에서는 다양한 요구수용과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향후 인력증원이나 업무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 **박재음** = 농약과 같은 위해물질들의 평가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EPA와 같은 기관은 세부분야별 전문가가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진청 차원에서 농자재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항간의 우려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가 인력풀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평가의 질과 전문성 향상이 시급합니다. 자체적으로는 금년부터 식약청의 평가업무를 벤치마킹하여 농약평가 전문연구위원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평가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잘못되거나 미흡한 기준은 당연히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준이 너무 세세하면 오히려 그것이 규제가 되어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업계도 반성과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 **최운홍** =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안전성 조사범위가 대형매장등 농산물의 유통 판매단계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 **안영수** = 과거에는 재배농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유통영역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생산단계와 같이 농산물 160품목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과 유통·판매를 연계·관리하고,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 중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대형업소는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 도입 초반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월말까지 지도·홍보 위주로 조사하고 4월부터 점차 조사를 강화 할 계획이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해 보다 실효성 있고 한 단계 높은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운홍 =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은 선진국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세인양 확산되는 친환경분 위기에 편승해 친환경인증 스티커 불법 인쇄, 인증번호 도용 등 좋은 먹거리를 사려는 소비자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실태는 어떠한지요?

▲ 안영수 = 인증품의 생산 유통증가와 비례해 유통업체에서 인증라벨 인쇄기를 이용, 관행농산물에 무단으로 부착한다든가, 인증 받은 생산자가 공급물량 부족시 관행농산물에 인증 표시하는 사례, 전자상거래시 인증품으로 광고하고 관행농산물을 배송하는 등 부정유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인증품의 유통·판매장에서 인증번호와 산지 출하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출고 내역 대조, 잔류농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시·군별 연 2회 이상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운홍 = 과거 공이 지대함에도 늘 수세적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농약안전성을 대변하는 분야가 학자와 학회이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음에도 코멘트나 투고 등 실제 그런 역할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 허장현 = 교육, 연구,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대학에서 잔류, 안전성, 환경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 학문적으로 표출 가능한 우려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성 관련 글이나 책자 발간이 미흡했다는 점이 일본과 대비될 수는 있으나, 학회나 세미나,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에 관한 의견 개진을 지속해 왔고 또 학자들은 홍보 이면도 조명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쪽 시각만으로는 학자나 연구자 활동에 제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공분



박재음
국립농업과학기술원
농약평가과장



농약등록평가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시험기준을 대폭 손질하며 평가기준도 명문화하여 기준 적용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평가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갈 생각합니다.



안영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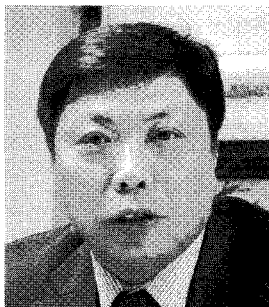


허 장 현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분법적 정성적인 개념을 넘어 이제는 얼마만한 양이면 우리에게 위해할 수 있느냐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개념 도입이 소비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정 문 기
한국농어민신문
편집부국장

야로 진출하는 학생들의 농약에 대한 시각을 온전히 하는 것도 학자들의 역할입니다. 또 과거에 비해 소비자나 언론의 시각도 정확해 졌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 최운홍 = 학자로서 보시는 최근 농약의 안전성과 역할은 세간의 우려와 얼마나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 허장현 = 솔직히 독성이나 잔류부분은 최근에 와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기업의 노력 덕분입니다. 관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일부 관리체계도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도 과거처럼 민감하지 않으며 이런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 잔류가 전혀 안 되는 농약도 꽤 많아졌습니다. 잔류기준 설정 부문도 소비자나 농업인 입장을 고려해 농진청과 식약청 간 잘 추진되고 있는 등 안전성 문제 극복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운홍 = 첨단시대를 사는 소비자들은 줄곧 '과학'과 '주관적인 상식' '검증되지 않은 트렌드'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명 이기(利器)를 접하는 소비자의 자세와 과학을 보는 소비자의 올바른 시각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허장현 = 농약은 분명 보다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약은 또 끊임없이 검증되어 왔습니다. 잔류농약 유무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 몫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분법적 정성적인 개념을 넘어 이제는 얼마만한 양이면 우리에게 위해할 수 있느냐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개념 도입이 소비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최운홍 =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배경에 물론 업계 몫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요 원인을 드신다면?

▲ 정문기 = 과거 식량증산 시기때만 해도 작물보호제에 대한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때 시장규모가 날로 확대됐

고 높은 매출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당시 수익창출에만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면 현재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며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은 급성독성이 강하고 농업인의 중독 사례가 많았던 과거 초기의 농약 이미지를 아직까지도 갖게 했다고 봅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작물보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사가 입증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합니다. 작물보호협회가 여론 주도층인 각종 소비자단체 회원은 물론 초등학교원, 나아가 작가 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식 제고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 관련기관, 지자체에서도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최운홍 = 극히 일부에서의 오남용으로 인한 농약의 부작용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당연히 과학적이며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문기 =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군요. 포도의 흰 얼룩이 마치 작물보호제가 묻은 것처럼 기사화됨에 등 '작물보호제가 안전하다'는 기사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언론이 독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좀 더 자

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즉 작물보호제에 대한 순기능을 알리는 접근이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언론의 역할이 비판 기능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작물보호제의 순기능에 대한 접근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식약청의 조사결과를 놓고 '왜'라는 인식보다 사실 그대로를 다루는 언론사들의 경향으로 볼 때 이미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운홍 =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농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특집 기사를 게재하는 등 전문지의 역할이 큼니다. 업계입장에서 소중한 자산인 전문지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까?

▲ 정문기 = 특히 전문지의 역할은 구독자가 농업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안전사용기준의 중요성 홍보나 안전한 작물보호제 개발 촉구 등은 본연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작물보호제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종사자들의 위상이 떨어진 것인데 이런 분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요구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사람이나 한 조직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관된 조직체들이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Y